

## (2) 기사 작성자를 위한 평가 리포트

### 기사 개요

제목: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

출처: 한국일보, 2025.02.04

기자: 최동순

기사 유형: 해설 기사/사회

편집 구조: 문제 제기 - 배경 설명 (현재 결정, 국회 논의 지연) - 구체적 사례 제시 (강력범죄 전과자) - 해결 방안 (입법 촉구) - 결론

취재 방식: 법무부, 국회 관계자 인용,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과거 사례 인용

분량: 약 1000자 내외 (원문 기준), 10문단

내용 요약: 외국인보호소 운영의 법적 근거가 5월 말 사라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특히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일괄 석방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회 논의 지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대한 평가

최동순 기자님, 안녕하세요.

시민 주도의 CR 프로젝트를 통해 귀하의 기사를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언론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함께 더 나은 저널리즘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기사의 주요 문제점

#### 1.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

최동순 기자의 기사는 제목과 도입부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라고 쓰셨는데, 이는 '살인 전과자'와 '일괄 석방 우려'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독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계엄 정국'이라는 표현으로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과장하여 법 개정 지연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다시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와 같은 표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마치 현실화될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이는 언론윤리헌장 1. 진실을 추구한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의도와 기술방식이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보도한다."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2. 균형성 및 공정성 부족

기사 전반에서 외국인보호소의 필요성과 입법 공백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치우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중엔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문장은 특정 관점을 강화하며, 야당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이나 반론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법무부의 입장과 우려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시민단체나 인권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져 균형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언론윤리헌장 4. 공정하게 보도한다: "윤리적 언론은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보도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적 사안을 다룰 때는 다양한 입장을 두루 담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을 보여준다."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② (공정정보도):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3. 인권 침해 소지

기사에서 특정 개인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살인 전과자도 있다. 중국 국적 장모씨는 둔기로 배우자를 살해하고 처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6년 11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출소한 장씨는 현재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함께 개인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의 사례에서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2세 의붓딸(한국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5년 2월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상세한 범죄 내용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윤리헌장 3.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합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라도 이를 보도할 때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공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 보도할 때는 인격권 보호에 더욱 주의한다."와 신문윤리강령 제5조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개선을 위한 제안

#### 1.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 사용

최동순 기자님께서서는 기사 작성 시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공포감을 조성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목 또한 기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독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괄 석방 우려' 대신 '법적 공백으로 인한 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과 같이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 반영

기사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인권 전문가, 그리고 외국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외국인보호소의 문제점을 다루는 내용을 보강하여 독자가 사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인권 보호 및 사생활 존중 강화

범죄 관련 보도 시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원 공개에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범죄 사실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하여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 공개는 지양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결론

최동순 기자님의 기사는 과장된 표현, 균형성 부족, 인권 침해 소지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히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독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희 CR 프로젝트는 언론의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비평을 지향합니다. 이 평가가 더 나은 저널리즘을 위한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